

Global Report

기후변화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COVID-19의 5가지 교훈

1. 서언
2. 교훈 1: 자연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금 완화를 우선시하라.
3. 교훈 2: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4. 교훈 3: 불평등은 더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5. 교훈 4: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협업을 필요로 한다.
6. 교훈 5: 과학적 정책 조언은 결코 가치가 없다.
7. 결언

1. 서언

수 세기에 걸쳐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와 인간 건강의 관계(nexus)에서 중대한 전 세계적 도전과제가 발생했으며, 그중 COVID-19는 단지 최신 징후일 수 있다. COVID-19 위기는 현대 역사에서 분명히 동시의 글로벌 건강과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지만, 기후 위기와 현저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전염병 유행 및 기후변화는 모두 정부 개입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글로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결정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 위기 동안 정책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것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5가지 정책 교훈을 얻었다. 첫째, 자연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초기에 단호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어렵다. 둘째, 광범위한 공적 지원은 조기 조치를 위해 중요하고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불평등은 위험 자체와 완화 정책 두 가지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다. 넷째, 글로벌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과학-정책 인터페이스에서 가치 판단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관점의 투명성과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민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각 교훈에 대해 두 경우 모두에서 효과적인 완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COVID-19와 기후변화 간의 공통점을 설명한다. 우리는 전염병 유행 동안 글로벌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기후 정책 설계를 위한 결론을 제시한다.

2. 교훈 1: 자연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금 완화를 우선시하라.

현재의 전염병 대유행은 정치 지도자들이 전례가 없는 위협에 직면하여 천천히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국가만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SARS-CoV-2의 진행을 늦추었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전염병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였지만, 체코나 그리스와 같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일부 국가 역시도 초기에 바이러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최근 바이러스 발생 경험이 부족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역 바이러스 전파가 발생하고 많은 확진자가 보고된 후에만 결정적으로 행동했다. 글로벌 위기 동안 격리 조치의 자연은 더욱 비극적이다. 이는 조기 조치가 비용과 피해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COVID-19의 경우 조기 조치를 함으로써 자연조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전면 폐쇄나 많은 수의 사상자들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국경에서의 건강 검진 증가, 연락처 추적, 공공 정보 캠페인 및 대만에서와 같이 거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등에서도 자연조치보다 훨씬 덜 극적인 조치가 있었다. 전염병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특정 형태의 폐쇄를 하루 만 연기하면 누적 확진자 수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1주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 3월 중순과 5월 초 사이에 55%의 사망 (36,000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자연 후 봉쇄가 실행되면 더 오래 유지되어야 하므로 사상자는 물론 경제적 손실도 증가한다.

COVID-19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척도의 기후 정책에 대한 결정은 자연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조치는 완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2018)의 최신 보고서는 우리 환경의 티핑포인트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피하기 위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2°C 대신 1.5°C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 행동 지연은 경제를 탄소 집약적 인프라에 고정시키고 미래 대응 옵션의 유연성을 감소시키며 국가 간 고르지 않은 분배 영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내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6개의 통합 평가 모델에 대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기후 행동을 10년 지연시키면 이후의 기후 행동 비용이 37% 증가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2012년 모델 비교 연구에서도 금세기 말까지 2도의 온난화에 상응하는 기후 정책을 2020년까지 지연시키면 완화 비용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심한 기상 현상, 산불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예상되는 미래 기후 피해의 경미한 전조일 뿐이다.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사회가 확대의 징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하여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한 경향이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로 정책을 구현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람직하게도, 현재의 위기는 의사 결정권자와 기관들에게 기후 행동을 지연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인식하도록 하고, 최근 바이러스 발생 경험에 있는 국가들이 COVID-19에 더 나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그들의 대응력을 증가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 완화의 긴급성을 경고하더라도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의사 결정은 정치적 경제 제약, 특히 산업 로비스트가 배출 감소를 지연 또는 약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섣다른은 심각한 수요 감소를 수반하고 단기적으로 산업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반면, 순 제로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화석 연료 집약적 생산 및 소비에서 벗어나 영구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

3 교훈 2: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전염병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행된 경제 폐쇄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특히 전염병에 대한 이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 유행병을 조기에 막기 위한 엄격하고 인기 없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주저했다. 시민들이 위협이 심각하거나 임박하다고 인식했을 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특정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증가했다. 전염병이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적어도 일부는 달려 있다. 위협의 임박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각각의 사회적 반응으로 판단할 때, SARS-CoV-2로 죽는 것은 환경 오염의 결과로 죽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쁘다. 이는 도덕적 원칙으로는 거의 정당화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아니든, 도덕적 판단의 관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로부터 인식된 속성들은 그것이 합당하다는 의식을 높이고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어렵게 만든다. 위협에 대한 인식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위협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다르게 인식된다. 한편으로 재난이 닥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감금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제한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시민들은 위협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연료, 육류 또는 항공 여행에 대한 높은 세금과 같은 자유에 대한 매우 사소한 제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후 정책의 경우, 보다 일반적으로 기후 행동에 대한 지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은 시민들이 특정 기후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더욱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를 선호하는 대다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명하고 명확한 공개 정보가 기후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정보만으로는 대중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정 현상 “세금 회피”와 같은 것이 강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정 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4 교훈 3 : 불평등은 더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COVID-19 전염병은 국가의 부와 전염병의 위협에 면역되지 않는 것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국가가 많은 확진자 수와 완전한 폐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경제 활동의 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가정은 바이러스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고 종종 의료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들의 직업적 상황과 투자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세계에서 한 국가의 국내 경제 번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나머지 국가의 경제 안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염병은 빈곤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국가(LICs: Low-Income Countries)와 중산층 국가(LMICs: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국가는 COVID-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인구의 더 많은 비율이 기존의 건강 상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종종 전염병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개발 도상국과 신흥국은 수출 지

향적이며 이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내에서는 이미 불우한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결과가 기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고용이 거의 없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COVID-19 전염병 또는 봉쇄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을 폐쇄해야 하는 시민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이 격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빈곤층도 관련 피해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적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피해가 기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특히 영향을 받는 가구가 기후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상되지 않을 때 더 큰 글로벌 완화 노력이 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탄소 가격 책정과 같은 완화 조치는 적어도 선진국에서 가난한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설문 조사 연구에 따르면 특히 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 정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훈 4: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협업을 필요로 한다.

5.1 국내 결과를 동반한 글로벌 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COVID-19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이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HICs: High-Income Countries)는 상당한 사망자, 실업 급증 및 경제 위축을 목격했다. 일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MICs: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의 경우 심각한 식량 부족과 빈곤 증가도 포함된다. 기후변화는 COVID-19와 유사하게 전 지구적 문제이다. 온난한 기후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확산의 영향은 모든 국가에서 느낄 것이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가장 심각하다.

5.2 국제 협력 단계

COVID-19 대응 과정에서 국제 협력이 증가했다. 이 프로세스는 4단계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부정주의로 인해 국제적 대응이 불충분했다. 이어 두 번째 대응단계인 국경 폐쇄 형태의 고립주의 조치, 국내 제조 능력의 갑작스러운 구축, 협력에 앞서 내부 목표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수사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는 이제 국제 협력의 세 번째 단계인 지식 및 자원 공유로 이동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글로벌 협력이다. 백신이 개발되면 신속한 생산 및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 인프라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4단계는 기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단계와 유사하다. 많은 국가에서의 부정주의는 2000년대 초반의 수단이었고, 일부 국가들에게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국가는 국내의 비 기후적 혜택이 포착될 수 있을 때만 기후에 긍정적인 이니셔티브에 따라 행동하면서 기후 고립주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5.3 다자간 및 다중심적 거버넌스

COVID-19는 많은 다자 기관의 운영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바이러스는 WHO의 약점을 드러내며 워싱턴의 자금 동결로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통화 기금(IMF)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강점으로 인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가 건강과 경제적 성과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 및 부채 경감의 글로벌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후에서 다자간 역할은 이전에 강조되어왔으며, 특히 경제 및 기후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전문성과 자본을 유도할 때 그러하여 왔다. 발전하고 있는 다자간 노력과 병행하여, 지방 및 지역 정부, 시민 사회 조직 및 기업 등 하위 국가 행위자와 연계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심적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국가 및 다자간 수준에서 정지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역의 실험 및 학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5.4 당파 분열 극복

COVID-19 대응에서 사회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지는 정치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했다. 국가의 작은

역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중도우파 정치 참여자들은 바이러스 초기 단계에서 COVID-19에 대한 우려를 덜 나타냈고, 이동성 제약의 신속한 제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의 속도와 행동의 심각성은 정치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분명해지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의 정부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자유 제한 폐쇄 정책을 도입했다. 기후 대화에서, 유사한 정치적 분열이 그것을 극복하려는 두드러진 시도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개입 의지는 개입하지 않았을때의 결과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데, 이는 중도좌파 참여자들이 중도우파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부 중도우파 개인들이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기 전까지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교훈 5: 과학적 정책 조언은 결코 가치가 없다

COVID-19 전염병은 과학적 전문 지식을 이례적으로 주목받게 했다. 많은 국가에서 바이러스 학자 및 역학자들이 전례없는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소셜 미디어 또는 팟 캐스트 형식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일반 청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과학계는 SARS-COV2에 대한 대응과 백신 개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보여준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 동시에, COVID-19를 둘러싼 의사 결정에서 과학의 역할도 양면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염병 학자 및 바이러스 학자들은 COVID-19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자신의 권한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공 정책과 관련된 과학적 전문 지식은 항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가치 판단은 공개적 심의와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학적 정책 자문가의 적절한 임무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정책 자문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의 특정 역할과 한계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과 다방면의 과학적 정책 자문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효과적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COVID-19 및 기후변화와 같은 진화하는 위기의 규모, 피해 및 가능한 궤적을 이해하려면 역학(epidemiology) 및 지구 물리학 또는 서술적 사회 과학에서 나온 경험적 증거가 필수적이다. 특정 완화 전략의 잠재적 효능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조치의 비례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정자는 역학자나 지구물리학자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조치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윤리적 절충을 수반할 때마다, 그들의 지지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적 가치 판단과 얽히게 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자연 과학의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선택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과 윤리의 전문 지식을 연결해야 한다. 특정 전문 지식에 따라 과학 정책 자문가의 적절한 권한은 때때로 조치의 효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것의 비례성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규범적 관점과 공개 토론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

과학과 정책의 교차점에서 COVID-19 전염병과 기후변화는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첫째, COVID-19와 유사하게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 정책 목표를 알리고 완화 조치의 잠재적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특히 자연 과학에서 얻은 과학자의 결과에 의존한다. 둘째, 역학 모델과 기후 과학의 모델은 가정에 대한 의존도를 공유하므로, 결과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기후 과학자들은 COVID-19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 과학 회의론(scepticism) 및 과학 정치화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는 COVID-19 전염병과 기후변화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OVID-19가 새로운 질병이고 전염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과학적 결과는 예비적이며 많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고, 역학적 예측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조언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 결정권자는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후변화 연구는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모델 개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훨씬 더 성숙해졌다. 또한, IPCC 보고서에는 지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엄격하고 통합된 과학적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 정부의 공무원이 승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기후 정책을 알리는 비교적 명확하고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7 결론

COVID-19 전염병과 기후변화는 모두 인간의 번영에 주요한 시스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COVID-19 정책 대응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는 기후 정책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시기적절한 조치를 보장하고, 완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개발하고, 과학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기후변화와 COVID-19 정책 과제를 비교한다. 우리는 좋은 정책 설계를 위한 중요한 유사점을 확인한다 (그림 참조) : (1) 자연은 비용이 많이 든다. (2) 심리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3) 정책은 더 나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불평등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4)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5) 과학적 정책 조언은 사실성과 내재적 가치 판단의 균형을 투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변화 완화가 왜 경제 정책 수립에 더 어려운 과제인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한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가 글로벌 경제의 심오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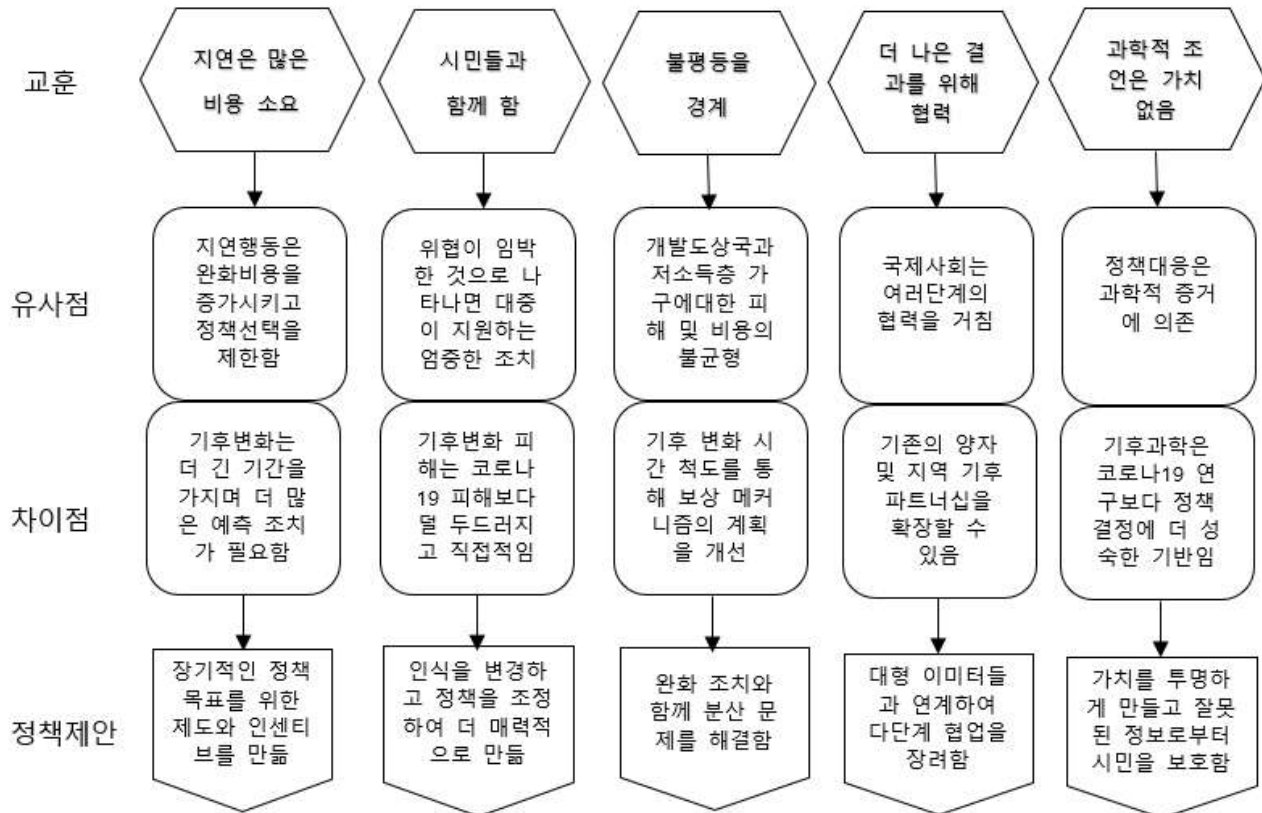


그림. COVID-19와 기후변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 요약 및 기후변화 정책 교훈

COVID-19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즉각적인 기후 투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선행 사례이다. 환경 경제학에서 권유하는 석탄의 단계적 폐지나 탄소 가격의 급상승은, 과거에 많은 정치인에 의해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견뎌내기 힘든 부담으로 여겨져 왔다. COVID-19 이후 기후변화를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제적 비용이 COVID-19 억제 조치의 비용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후 정책에 대한 경제적 주장을 폐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즉각적인 녹색 회복 부양책에 대한 제안들을 옹호한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전 세계 수준까지 번지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조직 및 제도를 강화하고, 장기 기후 정책에 필요한 공공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염병 위기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면 정책 입안자와 시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도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제목> Five Lessons from COVID-19 for Advanc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원문출처>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020) 76:751–778